

■ 여야 4대강 예산 점점 찾을까

민주 '水公 800억' 삭감땀 타협 용의

오늘 2+2회담 개최 절충점 모색 내년 예산안 연내 처리 노력 합의

내년 예산안 처리를 놓고 대치를 이어가던 여야가 막판 의견 절충을 하며 퇴로찾기에 나서 주목된다.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와 이강래 민주당 원내대표는 22일 오전 김형오 국회의장의 중재로 회동, 새해 예산안이 연내에 처리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여야는 이에 따라 4대강 예산안의 핵심 쟁점인 수자원공사 사업 관련이자 800억원 보전을 포함, 4대강 문체에 대해 원내대표 외에 1명씩 예산 관계자를 선정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키로 했다.

양당은 이에 따라 늦어도 23일 4차 회담을 열어 4대강 예산에 관한 절충점을 모색할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민주당은 협상 대표로 당 예결위원장이자 당내 '4대강 전문가'로 꼽히는 박병석 의원을 내세우기로 했으며, 한나라당도 4대강 예산 등에精通한 인사를 선발할 방침이다.

이처럼 여야가 전향된 모습을 보인 데는 민주당의 양보가 원인이 됐다. 여권이 3차회담을 거부하는 등 예산안 합의의 처리에 대해 무성의한 모습을 보이던데도 불구하고, 4대강 예산에 대한 입장 변화 가능성을 열어두며 원내대표 회담을 제안했고 이를 한나라당이

수용한 것이다.

물론 여야가 협상 테이블에 앉았다고 해서 바로 해법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그만큼 4대강 예산에 대한 입장차는 여전히 크다. 때문에 민주당은 한나라당의 그동안 행태를 비판하며 변화된 모습을 보여줄 것을 압박했다.

정세균 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날 "여당이 청와대 쪽두각시로 전락한 상황이 치우쳐야 한다"며 "지금

은 비상상황으로, 국민의 뜻을 받을 겁니다"고 강조했다.

그럼에도, 민주당 내에는 4대강 예산과 관련, 수자원공사의 이자보전비용 800억원 전면삭감안 이뤄지면 국도 해양부의 4대강 예산 삭감 가이드라인 '1조원'에 집착하지 않겠다는 다소 유연한 기류가 점점 확산하고 있다.

여야 의원 12명의 중재안 마련에 참석했던 김효석 의원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여야가 한발씩 양보해 국회 파행만은 막아야 한다"며 "민주당도 4대강 예산을 1조원 이내로 해야 한다는데 너무 얽매이지 말고 협상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나라당도 민주당의 기류 변화에

주목하며 주호영 특임장관을 불러 정부 측 입장을 들어보는 등 전향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여야가 이처럼 한 발짝 물러서 점점 찾아가 나신 것은 예산안 연내 처리가 무산돼 준예산이 편성되는 사상초유의 사태를 맞으면 여야 모두 여론의 역풍을 맞는다는 부담감 때문이다.

결국, 예산 국회는 여야 협상단의 합의의 결과에 따라 좌우되게 됐다. 그리고 나아가 청와대가 그동안의 강경한 태도에서 한발 물러날 수 있느냐와 민주당 강경파의 양보도 예산안 합의의 처리의 열쇠가 될 것으로 보인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와 민주당 이강래 원내대표가 22일 오전 국회의장실에서 회담을 하고 있다. 이날 회동은 김형오 국회의장의 중재로 성사됐다. /연합뉴스

정개특위 '반쪽특위'로 끝나나

기초의원 소선거구 개편 등 핵심쟁점 합의 못해

국회 정치개혁특위 활동이 막바지에 접어들고 있으나 여야가 핵심 쟁점 사안에 대해 합의를 이루지 못해 결국 '반쪽 특위'라는 오명을 얻을 전망이다.

22일 김충조 정개특위 위원장과 한나라당 간사인 장윤석 의원, 민주당 간사인 서갑원 의원, 한나라당 허태열 정치선진화특위 위원장 등은 회동을 갖고 남은 쟁점에 대해 협의했으나 여야 이견 등으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에 따라 지역 대표성 확보 차원에서 기초의원 선거구를 중선거구제에서 소선거구제로 개편하는 방안은 무위로 돌아갔다.

민주당은 소선거구제로 갈 경우

영남지역 등 야당의 지방의회 진출이 어려워진다는 반대론으로 알려졌다.

또한, 국민과의 소통 강화를 명분으로 추진됐던 지구당 부활 문제는 불발 및 고비용 정치가 다시 거론되면서 없었던 일이 됐다.

정개특위 관계자는 "지역 사무실은 원의 위원장들의 기간조직 부활을 의미하기 때문에 현역 의원이 많

은 한나라당의 반대가 컸다"고 전했다.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 현행 오후 6시인 국회의원 총선과 지방선거 투표시간을 오후 8시로 연장하자는 안은 여당의 반대로, 현재 일 년에 두 번인 재보선을 연 1회로 줄이자는 안은 야당의 반대로 각각 무산됐다.

의원직 상실형의 상향선을 현재 벌금 100만원 이상에서 상향조정

하는 안과 후원금 기부자에 대한 정보요청권을 주고 문제가 있는 후원금일 경우 반납하면 형사 처벌을 면제해주는 안은 '정치개혁 후퇴'라는 여론에 밀려 무산됐다.

한편, 헌법 불합치 결정을 받은 시·도의원 지역구 재조정 문제, 여성 지방의원 수 확대 문제, 법인의 비정치 기탁금의 정당 배분 허용 등에 대해서는 추가 협의를 통해 정리하기로 했다.

김충조 위원장은 "일정을 고려, 일단 합의된 것만 남기기로 전체 회의로 넘기기로 했다"며 "합의점이 도출되지 않은 안건 등은 다음 특위에서 논의될 것"이라고 말했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삼성 의약분야 세종시 이전?

30대 그룹 중 20곳 "상황보고 결정"

정총리 언급 대기업은

정부가 내달 11일 세종시 대안을 발표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새로운 대기업이 하나 세종시에 올 것"이라고 한 정운찬 총리의 최근 언급이 산업계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유력 재벌그룹 대다수는 정부의 확정된 세종시 대안을 보고 인센티브에 따라 입장을 정하겠다는 방침이기 때문에 세종시 대안이 발표되면 기업들의 세종시 투자 움직임도 가시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30대 그룹 중 20곳 '상황보고 결정' = 30대 그룹 중 4대 재벌그룹을 포함한 20곳이 추후 상황을 지켜보고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기업들이 정부가 제시하는 '단근'에 따라서는 세종시 투자에

나설 수도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 재계의 한 소식통은 22일 "정부가 세종시의 땅을 평당 40만 원대로 공급한다면 대다수 기업은 부동산 투자 차원에서라도 관심을 가질만하다"고 말했다.

정부가 어떤 인센티브를 최종안으로 확정할지는 아직 불분명하지만 각종 세금 면제나 저렴한 토지 공급 등의 혜택이 제공된다면 기업들이 세종시 이전에 매력을 느낄 것이라는 얘기다.

◇삼성=? = 대기업들이 세종시 이전 문제에 대해 뚜렷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는 가운데 삼성그룹에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최대 재벌그룹이라는 상징성이 있는데다가 최근 계속되는 이견회 전 회장의 사면설과 맞물려 정부와 모종의 '빅딜'이 이뤄질지 모른다는

주변의 관측 때문이다.

특히 정 총리가 지난 19일 청주 지역 시민사회단체장 오찬간담회에서 "새로운 대기업이 하나 올 것"이라고 말씀드린다"고 발언한 이후 삼성이 주목받고 있다.

삼성엔 신수중 사업으로 '바이오 시밀러' 등의 약분야 사업을 추진 중이고, 이런 분야가 세종시로 갈 공산이 크다는 일각의 분석과 달아 있어서다.

그러나 삼성 측은 여전히 세종시 이전문제에 대해 "이야기할 만한 것이 없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정부의 세종시 실무기획단도 이날 보도자료를 내 "정부가 특정 조건을 놓고 특정기업과 협상한 바는 일절 없음을 분명히 알린다"며 "입주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는 개별기업과 협상을 통해 정해지지 않는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MB "세종시 대안은 내 책임"

'충청민심 달래기' 어제 대전 방문

이명박 대통령은 22일 세종시 대안 제시와 관련, 책임은 총리가 아닌 자신에게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대전 유성구 한 국전자통신연구원(ETRI)에서 열린 오찬 간담회에서 "(세종시) 대안을 만들고자 하는 것은 대통령에게 책임이 있다"며 "총리가 책임이 있는 것은 아니다. 총리는 지시를 받고 하는 일이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충청도가 국가관

있는 지역이라고 보고 있다. 나라를 위해 목숨 바치고 헌신하신 분들이 역사적으로 얼마나 많았나"면서 "그렇기 때문에 나도 나라를 위해 일하면 이해해주지 않을까 생각한다. 나는 정부가 정말 성의껏, 열의껏 해서 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나도 선거때까지는 정치적으로 발언했다. 그때 말하면서 속으로는 부끄러웠다. 이렇게 말해도 되는 건가 생각했다"고 말

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1년 이상 고민을 했다. 잠자기 전에는 '에이, 뭐 좋은 게 좋은 거다. 다음 대통령 때 할 꺼니까' 이렇게 생각하다가 또 자고 나면 국민들이 적당히 하라고 나를 대통령으로 뽑아줬을까 생각하면서 많은 고민을 했다"고 토로했다.

이 대통령은 또 "저는 정치를 다시 할 사람이 아니다. 대통령 한번 하고 나서 나라가 잘되는 쪽으로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려고 한다"면서 "어떤 때는 너무 정치적이 아니라서 개인적으로 손해볼 때가 많다. 지난 대선에서 충청도에서 표를 많이 얻었는데 국민에게 보답하는 길은 정말 일꾼으로서 일을 열심히 하는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檢 한명숙 불구속 기소... 대책위 '신빙성 없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권오성 부장검사)는 22일 광영곡(69·구속기소) 전 대한통운 사장에게 인사청탁 혐의로 5만 달러를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로 한명숙(65) 전 국무총리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횡령 혐의로 이미 구속기

소된 광씨도 뇌물공여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한 전 총리는 2006년 12월 20일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 본관 1층 식당에서 광씨로부터 대한석탄공사 사장으로 임명될 수 있게 해달라는 취지의 청탁과 함께 2만달

러와 3만달러가 든 편지봉투 2개를 받는 등 5만 달러를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러나 '한명숙 정치공작 분쇄 공동대책위원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증거도, 증인도 없고, 진술의 일관성과 신빙성도 없는 상황에서 70세 노인의 주장만을 바탕으로 작성된 공소장"이라며 "당당하고 의연하게 재판에 임해 진실의 힘을 보여드릴 것"이라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주소창에 "한빛고시학원"만 쳐보세요

2010년 국가직 9급공무원 시험 4월 10일 / 국가직 7급공무원 시험 7월 24일
전남지방직 9급 5월 22일 / 전남지방직 7급 10월 9일

압도적 1위 한빛!

7.9급 공무원 합격실명회 **12월 28(월) 14:30 ~ 17:55**
알고 시작하면 빠르다!

합격하고 싶다면 한빛고시학원을 통하라!!

7.9급 종합반 2개월 완성 행정직/세무직/검찰직/법원직/소방직
교육행정직/사회복지직/농업직/기술직/경찰직

합격실명회 합격률 99.9%

한빛최고의 합격시스템 전국최고의 강사진, 최고의 시설에서
당신은 수확할 뿐입니다.

대학재학생, 직장인들 **말아간반개설**

= 2012년까지 소방공무원 8,000명 증원에정 =

소방직 전문 소방체력측정기 무료체험

개강 1월 4일 **종합/단과반** (전직종 2개월 완성)

한빛고시학원 **광주 북구청앞**
 지매학원 ▶ 김영편입학원(광주 동부경찰서 뒤 02-227-8088), 한빛경찰학원(북구청 앞 02-262-3553) **(062) 234-0234**